

검찰총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통령의 '검찰공화국 1년'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통합의 힘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

2022년 3월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 뒤에 걸려있던 문장이다. 역대 대통령의 당선이 모두 그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두고는 더욱 많은 타이틀이 쏟아졌다. 제6공화국 이후 공직 선거에 처음 출마한 정치 신인이 바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첫 사례였고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었으며, 역대 대선 중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동시에 역대 최소 득표차를 기록하며 당선된 대통령이었다.

일명 집권 10년 주기론을 깬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은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보수정권이 이렇게 빨리 다시 집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었던 진보진영에도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초 접전을 이뤘던 대선의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보단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평가된다.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까지 이끌어냈던 촛불 민심을 기반으로 출범한 민주정권 역시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끌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엄중한 경고였다. 권력주기의 단축은 정권심판론의 정서가 더욱 거세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접전 끝에 겨우 승리를 움켜쥔 윤석열 대통령 역시 당선 직후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며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모시겠다”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로부터 1년이 흘러온 지금, 대통령이 약속한 ‘헌법정신 존중’, ‘의

회 존중’, ‘야당 협치’는 눈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없애겠다고 약속했던 ‘분열과 분노의 정치’만이 남았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존재감을 각인시켰던 그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만 남기겠다’는 검사동일체 사고로 불법 선거개입 의혹까지 감수해가며 결국 여당을 사당화하는 데까지 성공했다.

윤석열 정부 1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낡은 극단정치의 부활이다.

검찰 출신 인사 70여명 진출, 검찰공화국으로 퇴행하다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직행한 대통령은 주요 요직의 인사들 역시 검찰 출신 인사로 가득 채웠다. 취임 1주일 만에 이뤄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격 발탁은 윤석열 대통령이 펼칠 ‘검치’의 예고편에 불과했다. 이후 행정부와 정부여당, 대통령실의 주요 요직에도 검찰 출신 인사가 속속들이 배치되었다. 윤석열 정부 100대 요직 중 검찰 출신은 10%가 넘는 12명에 달한다. 두 자릿수에 달하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치권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부 내각에 발탁되는 일은 전무후무한 사례다.

검찰출신 인사들은 노른자로 꼽히는 핵심 보직에 배치되었다. 역대 정부의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에 각각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정과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배치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등 대통령은 자신의 손과 발이 될 대통령실 핵심 요직을 전부 검찰 출신 인사로 채웠다. 정부 요직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권영세 통일부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 검찰 출신 장관만 4명인 데다가, 주요 요직 중 이완규 법제처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 정승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검사 출신이다. 그야말로 분야와 영역을 가리지 않고 검찰 출신들을 기용한 것이다.

‘검찰일색’인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우리 사회의 최고 엘리트이며 모든 분야의 전문가인 검찰이 사회 전반을 다 장악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을 투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드러나 낙마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가진 경찰마저 들어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 인사가 국수본부장에 배치되어 수사권을 장악할 수 있다면 아들 학폭 논란 따위는 흠결도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인사검증의 키를 쥐고 있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정순신 임명을 통과시켰다. 검사동일체 정부를 향한 대통령의 의지가 국가 차원의 인사시스템까지 마비시켰다.

집권 1년차가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검찰총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들이밀고 있다. 상명하복과 일사분란의 수직적 검찰 문화가 국정 작동 원리로 기

능했다. 대통령 본인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이 잘못 들은 것이라며 도리어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는 권위주의는 말할 것도 없다.

심지어는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마저도 다음날 대통령실의 한 마디에 번복되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2023년도 예산안 등 크고 작은 국회의 결정에 대해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하며 무협치로 일관했다. 국민 159명을 잃은 참사 앞에서 이상민 장관을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대통령의 ‘제사람 지키기’는 결국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 소추라는 결과를 낳았다.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국회 위에 군림하겠다는 ‘검사 동일체’ 국정운영 기조로 인해 여야 간 타협은 실종되었고 강대강의 극한 대립만이 남았다.

수사·기소·압수수색의 사정정국의 포문이 열린다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직후 민정수석실 폐지를 제1과제로 꼽으며 했던 말이다. 윤 대통령이 ‘사직 동팀’까지 거론하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데에는 민정수석실이 국정원·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좌지우지하며 정적을 통제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는 시각이 깔려 있었다. 또한 법과 공정을 내세우며 당선된 만큼, 대통령의 권한이 초법적으로 휘둘러지지 않게끔 스스로 경계하겠다는 뜻도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초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당선 이후 대통령은 경찰과 검찰은 물론, 감사원까지 동원해 전 정권 때려잡기에 몰두하며 사정정국의 포문을 열었다.

가장 먼저 대통령의 칼날이 향한 곳은 대통령의 최대 정적인 제1야당 대표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공안 수사1·2·3부를 전부 내세워 275차례에 걸친 무분별한 압수수색까지 벌이며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찰은 정작 이재명 대표가 뇌물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물증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증거 부족으로 기소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어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검찰의 무리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정치 검찰’의 면모뿐이다.

전 정부를 향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역시 점점 그 속내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난 달 감사원은 ‘전 국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정부가 총선에 개입하려는 의도였는지, ‘건전 재정’을 해친 것은 아닌지 조사하겠다고 선포했다. 현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감사원이 정권의 칼자루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전 정부 트집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감사원의 행보는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했던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이 소신이었음을 증명한다.

시민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 역시 시작되었다. 검찰은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노조 때리기’라는 목표 하나로, 불공정하고 비논리적인 수사를 자행했다. 경찰과 검찰은 노동조합에 무려 ‘사용자에 대한 공갈협박죄’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핑계 삼아 시민사회 인사들을 줄줄이 구속했다.

반대세력을 ‘간첩’으로 낙인찍는 국정원의 경찰의 공안몰이 역시 부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선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중복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은 ‘민주노총을 해체하겠다’는 반 헌법적인 발언으로 못매를 맞기도 했다. 모두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대통령령의 관저에 불려가 축하 만찬을 대접받고 난 직후 일어난 일이었다.

국정원은 몇 달째 민주노총에 침투한 간첩을 수사한다며 압수수색과 관련자 체포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증거와 수사결과를 제출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심지어 최근에는 기자로 위장해 노조의 기자회견을 몰래 촬영하다가 덜미를 잡히며 웃지 못할 코미디를 연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사실 관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자극적인 표현과 수사기관만 알 수 있는 피의사실이 보수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정부여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받아 정부의 실정에 비판하는 세력은 모두 ‘중복간첩단’의 지령을 받는 세력인 양 매도하는 사정 드라이브가 반복되고 있다. 이쯤 되면 정치적 낙인을 가하고 자 없는 죄를 만드는 수준이다.

‘합법을 가정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려는’ 사정기관들의 초법적인 행태가 정치와 언론, 시민사회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침범하는 사정정국이 펼쳐지고 있다. 고금리·고물가 시대 민생경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 노조 때리기와 사정정국으로 지지율을 올리려는 알팍한 계산으로 보인다. 더욱 비판적인 점은 이제 정부여당마저 사당화에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정 드라이브가 더욱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참사 앞에서도 ‘법적 책임’만 찾는 무책임 정부

윤석열 정부의 ‘무치無恥’는 159명의 국민을 잃은 10.29 이태원 참사 앞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참사를 수습하고 책임을 통감했어야 할 대통령은 마치 수사 지휘하듯 참사를 대했다. 참사 직후였던 10월 31일,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밝힌 참사의 원인은 ‘주최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재’였다.

‘법령미비’라는 대통령의 한 마디가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했다.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 이후 한덕수 총리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의 책임자들은 모두 책임회피로 일관하며 버텼다. 총리는 외신과의 기자회견에서 “주최가 없는 경우 경찰이 선제적으로 군중 관리를 할 수 없다”며 제도상의 문제로 책임을 회피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는, 유례없는 사안이라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었다”라며 문제를 축소하기 바빴다.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국민의 분노를 키운 것은 바로 대통령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참사 이후 140일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유가족과 국민을 향한 책임 있는 사과와 다짐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미 충분히 사과했다고 주장하지만, 참사 6일 만에 종교계의 추모행사에서 “죄송하다”고 한 마디한 것이 그 ‘사과’의 전부였다. 국가수반인 대통령이 제대로 된 사과도,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으니 그 화살이 피해자와 희생자 그리고 유가족을 향하기 시작했다.

참사 앞에서 ‘무한책임’을 이야기했던 윤석열 정부는 정작 정부의 책임자 중 그 누구도 경질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도리어 여당 지도부를 향해 “장관 하나 못 지키나”라고 호통을 치며 이상민 장관 방탄에 앞장섰다. 이미 대통령과 한 몸이 된 국민의힘 역시 수사를 핑계로 국정조사를 거부하며 ‘사법적 책임의 증명’과 ‘법적절차 이후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

법조계 인사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여당에서 ‘법적절차’와 ‘사법적 책임’의 의미를 모를 리 없다. 참사의 책임을 사법적 책임으로만 선을 긋는 국민의힘의 태도에는 정부의 ‘책임’을 지워내겠다는 함의가 깔려 있다. 일선 경찰, 혹은 일선 소방관 일부의 ‘사법적 책임’만 따지는 수사에서는 국가의 책임은 축소되거나 지워진다. 참사의 책임을 형사책임으로 좁히려는 특수본의 몰아가기식 수사는 일선 공무원들의 잇따른 자살을 낳았다. 국민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도리어 수사를 하듯 참사를 대하여 뒷선의 책임만 끊어내려고 하니, 현장에서 똬 공무원들에게 형사책임의 압박감이 고스란히 전가된 것이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던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책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가의 책임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법치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기된 책무를 스스로 내던진 대통령 본인에 의해 형해화되었다.

이상민 장관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삼권분립·민주주의·법치주의 모두 내팽개치는 윤석열 정권의 오만함은 점점 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보고서에서 국정조사 결과를 ‘정정’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국감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임의문서를 가지고 사적 의견을 표출한 행정권 남용도 문제지만, 정정을 요청한 내용이 더욱 심각하다.

행정안전부가 법령 위반까지 감수하면서 정정을 요청한 내용은 이상민 장관 탄핵의 핵심 사유가 되었던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과 중대본 설치, 유가족 명단에 대한 발언들이다. 이상민 장관이 직접 국정조사장에 출석해 증인선서까지 한 후 증언한 내용에 대해, 국회가 지적하고 탄핵까지 소추한 사안에 대해 정정을 해달라는 초법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세력을 탄압할 때는 법치주의를 몽둥이처럼 휘두르면서, 정작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법과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인 장면이다.

검사동일체에 이은 당정동일체의 등장... 야3당 공조로 맞서야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1년에 맞추어 열렸던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희당’의 완성으로 막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동일체’는 ‘당정동일체’로 이어졌다. 대통령은 당무개입을 넘어 불법적인 선거개입까지 불사하며 ‘사당화’의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부터 대통령의 조직적 사당화 프로젝트는 시동을 걸고 있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대통령실의 당무개입은 5번에 걸쳐 드러났다. 이준석 당 대표를 쫓아낸 것이 그 시작이었고 당원 투표 100%로 룰을 바꿔서 유승민 전 의원을 찍어 누른 것이 두 번째였다.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장에서 해임하고 이조차 부족해서 초선의원 연판장까지 돌려서 주저앉힌 것이 3번째 당무개입이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대통령은 정무수석을 통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김영우 전 의원을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내쫓으며 안철수 후보에 대한 적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전당대회 막바지에는 대통령실 직원의 김기현 후보 선거운동 녹취까지 공개되었다.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자, 윤희관들은 해당 문제를 두고 ‘당정동일체를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려 들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개입은 단순히 ‘당정동일체냐, 당정분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 사당화 시도 그 자체였다.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서 국회를 조직하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통해 시민사회를 조직했던 치밀하고도 노골적인 사당화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사당화’ 정치의 약점은 중도층 확장에 실패할 수 없다는 데 있다. 1년 전 대선 때처럼 ‘우린 저들과 다르다’고 내세우며 허울 좋은 약속 몇 개 한다고 민심을 끌어올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1년 동안 한국 사회가 더 나빠졌다고 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못 살겠다, 바꿔보자’의 민심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총선을 1년 남긴 지금, 대통령의 반 헌법적 폭주를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민주진보진영의 공조가 여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청되는 이유다. 반민주적인 정부여당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주눅 들지 않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해내었던 야3당의 단호한 행보에 국민들은 호응과 지지를 보냈다. 지금의 정국 역시 윤석열 정부의 반 헌법적 퇴행에 맞서 야3당의 공조를 강화해 민생을 지켜야 할 때이다. 진상규명을 집요하게 방해했던 여당에 맞서 국정조사 특위 설치를 가결시켰던 것처럼, 후안무치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기어이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통과시켰던 것처럼, 정치가 해야 할 도리를 우직하게 해내야 한다.

오늘날의 검찰공화국을 만든 데에는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자리를 내어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역시 작지 않다. 촛불 이후 정치의 과제는 국민이 열망했던 개혁과제를 완고한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서라도 빠르고 제대로 수행해내는 데 있었다. 개혁과제 앞에서 좌고우면했던 집권당의 행보는 180석의 대승 이후 불과 1년 뒤 치러진 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이 탄핵대상이었던 국민의힘에게 패배한 근본적 원인이었다.

1년 후 총선에서 뼈아픈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제1야당 역시 민주주의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의 최전선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고금리·고물가 위기에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민주진보진영은 민생을 지키기 위한 대안과 개혁으로 정부와 맞서야 한다.

조금 더디지만 대안이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한국판 횡재세와 탄소세 등이 대표적이다. 이뿐 아니라 최근 반도체, 자동차산업 등과 연계된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한국의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투자가 오로지 소수의 대기업에게 독식 되지 않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논의도 시작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반 민생 폭주에 맞선 대안 중심의 공조 드라이브로 우리 사회의 복합적 경제위기를 해소해 나가야 국민의 국가와 정치에 대한 신뢰 역시 회복할 수 있다.

기본소득당 역시 늘 그래왔듯 반대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서너 걸음 앞선 대안을 무기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멈추도록 막아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그 책무를 기꺼이 받아 안아, 가장 명확한 분석과 대안을 토대로 반 윤석열 전선을 새롭게 구축하며 야3당의 공조를 견인해야 할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해내겠다는 약속으로 이 글을 맺는다.